

이재경 자진 사퇴... 이재명 리더십 '타격'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내정자

**'천안함 자폭' 등 과거 발언 논란
비명계 "李 사당화... 책임져야"
지도부 "위원장 인선 다시 착수"
당내선 "절차 등 의견 수렴해야"**



국민들한테 자세히 밝히고 그에 따라서 책임 문제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영향력이 막대하게 미치고 당내 강성들도 득세하고 팬덤이 득실거리며 공격하는 상황에서 온전하게 혁신위의 리더십이 있을 수 있겠냐"며 "이 대표가 빨리 진퇴를 결정해서 물러나는 것이 본인과 당을 위해서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 사퇴론을 꺼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장 인선을 공론화도 없고 검증도 제대로 안 된 상태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본질적인 결함이라고 생각한다"며 "추천, 검증 과정을 당원과

"이 대표 쪽에 있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본다"며 "이 대표 체제의 결함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위를 두겠다는 것이었는데 본질은 이 대표 체제를 강화시키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김철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명운을 좌우할 혁신위원장이라면, 당 원로들과 중진의원들, 그리고 오랜 세월 당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심사숙고해서 선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는 혁신위원장 인선을 위한 절차에 다시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선부터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물론 인선 절차에 대한 당내 불만에서부터 추후 인선에 대한 대한 의구심이 터져나와 '이재명 리더십'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따라서 이 대표가 혁신기구 수장 임명에 다양한 당내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내부 갈등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이사장은 과거부터 친명 행보를 보여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계파 색채가 뚜렷한 친명 인사에게 당 쇄신의 전권을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당초 혁신기구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게 당내의 목소리다.

비명계 중진인 홍영표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이사장의 내정을 철회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절대 한쪽으로 편중된 인사가 아닌 전문성, 중립성, 민주성, 통합조정 능력을 가진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선 새 혁신위원장 선임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당내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인선 절차에서부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인선을 발표하며 "새 혁신기구의 명칭, 역할 등은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이사장이 지난 2019년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 구성의 대표 제안자 가운데 한 명으로 밝혀지면서 친명계 행보를 보였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천안함 자폭설, 코로나 미국 기원설, 대선 조작설 등 음모론 관련 페이스북 글을 게시해 논란이 됐다.

결국 이 대표가 이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낙점한 지 9시간 만에 이 이사장은 과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尹 "대한민국 영웅 예우는 헌법 실천 명령"

**제68회 현충일 추념사서 강조
"한미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충일을 맞아 순국 선열, 호국 영령, 순직 영웅들의 넋을 기리면서 이들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 68회 현충일 추념식의 추념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 살피고 예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김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성공일 소방교를 언급하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성공일 소방교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맞선 강한 국방과 안보태세를 강조하면서, 지난 4월 국민 방미에서 도출해낸 '위싱턴선언'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범

제화했다"며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위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이제 한미동맹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군 16만명이 전사했지만 아직도 12만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다"며 "정부는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선열들의 유해를 모셔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으로 6·25 전사자, 군인·경찰·해경·소방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의 유가족들과 함께 입장했다.

이는 정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유족을 최고로 예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동반 입장한 유족은 현충일 추념식에 앞서 진행된 '호국의 형제' 안장식 주인공인 고(故)김봉학·성학 육군 일병의 동생 김성환 씨, 6·25전사자 유족인 이천수·고영찬 씨, 순직 군인 유가족 이준신 씨, 순직 경찰 유가족 이꽃님 씨, 순직 해경 유가족 황상철 씨, 순직 소방 유가족 박현숙 씨 등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자격·수준 미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 대해 "어떤 잣대로 봐도 자격미달, 함량미달, 수준미달"이라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 시절 정권에 부정적인 보도들에는 고소 남발로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공영방송 사장 해임, 낙하산 사장 선임, 언론인 해직 사태 등을 주도하면서 언론장악 최선봉에 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공정성과 중립성이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인사를 앉혀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후진국 대열로 추락시키는 선봉장에 세우려는 건가.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인가. 내로남불의 전형이다"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 은폐 의혹도 언급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학교 폭력에 가담했지만 학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반드시 열어야 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도 열지 않고 전학을 보내는 바람에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 학폭 문제로 사퇴한 게 불과 석 달 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녀 학폭 가해자 이력"이 윤석열 정권에선 공직 임명의 가산점인가. 그게 아니면 자녀 학폭 가해 사실이 있어도 한 자리 해 먹어보겠다는 뻔뻔한 결기 정도는 있어야 언론 장악도 하고 경찰 장악도 할 수 있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서울=김선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산단·농공단지·경자구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

오늘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경제자유구역 일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통합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일 공포, 7월9일 시행을 앞둔 상위법인 통합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담겼다.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립하되, 행안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계획 수립과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평가는 계획 수립주체가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자체평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종합평가', 부진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심층평가'로 나눠 실시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도 규정했다.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으로 이전 또는 투자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와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특별히 설치·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가 기업과 협의 후 지정 또는 해제 신청을 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해제한다.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으로는 △산업입지법상 국가사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농공단지 △경제자유구역법상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법상 연구개발특구 △혁신도시법상 혁신도시 △기업도시법상 기업도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시·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 기업과 협의해 정하는 지역 등으로 정했다.

기회발전특구 계획에는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개발 및 관리방법 △산업 육성전략 △지원계획 △투자 등에 필요한 규제 특례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산업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지방 사업장 신설 및 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대상도 구체

화했다.

또 기존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7월중 출범하는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위원회 산하 주요 임무 및 지원 조직을 적시했다.

중앙부처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 300명 이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지방시대기획단을 꾸리고 행안부와 산업부가 법령 제·개정 등 업무 지원을, 기타 중앙행정기관이 계획 수립·운영과 연차보고 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 산업연구원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도 두도록 했다.

시·도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꾸린다. 위원회 운영을 돕는 시·도 지방시대지원단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시·군·구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시·군·구청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서울=김선욱 기자